



배포 일시	2022. 11. 7.(월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(044-201-3817) 팀 장 이경수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(044-201-4756) 성경림(044-201-3813)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심야 택시난 대책의 정책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(10.4)」의 후속조치로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편성·운영(10.26), 심야 탄력호출료(10.28~11.3) 출시, 부제해제 등 규제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,

○ 주요 플랫폼 업체의 배차 성공률(배차 성공건수/호출 요청건수)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실제, 서울지역의 심야(22~03시) 평균 배차성공률의 경우, 대책발표(10.4) 이후부터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, 11월 첫째주(10.31~11.6)는 배차성공률이 약 50%를 기록하였다.

< 서울지역의 심야 평균 배차성공률 (출처 : 플랫폼 A社) >

	7월	10월1주 (10.3~9)	10월2주 (10.10~16)	10월3주 (10.17~23)	10월4주 (10.24~30)	11월1주 (10.31~11.6)
A社	23%	25%	38%	38%	28%	50%

□ 국토교통부 김종오 모빌리티정책과장은 “데이터 상으로는 대책 발표 이후 심야택시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, 이는 지난주 국가애도기간(10.30~11.5)으로 인한 수요감소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, 현 시점에서 대책의 효과를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”면서,

○ “향후 탄력호출료 제도가 정착되고, 택시 부제해제, 서울시의 심야할증요금인상 등이 본격시행되면 예전에 비해 택시 수급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한편, 일부 보도(동아, 11.7 등)에서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, 단거리일 경우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「택시발전법」상 승차거부*에 해당되므로, 플랫폼업체에 자구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고,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* (택시발전법 제16조)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,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경우 경고(1회 위반) ~ 택시운송 자격취소(3회 위반) 가능
-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택시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부제해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,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.